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검찰 특수부 3곳만 남기고 폐지

조국 장관 대신 김오수 차관 국무회의 참석 서울·대구·광주 존속... 반부패수사부로 개칭 공무원 직무·중요 기업 범죄 수사에 한정돼

정부가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3개를 제외한 전국 검찰청의 특별수사부(특수부)를 폐지하는 방안을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 사무규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에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사퇴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했다. 조 전 장관은 전날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한 뒤 사의를 표명했다. 개정안 통과로 남아있는 특수부의

이름은 반부패수사부로 바뀌었다. 반부패수사부가 다루는 사건은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와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규정됐다. 기존의 특수부는 '검사가 지정한 사건'을 수사할 수 있었지만 반부패수사부로 바뀌면서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가 좁아진 것이다. 이와 함께 수원지검·인천지검·부산지검·대전지검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됐다. 이는 형사부 강화 방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공포·시행된다. 다만 시행일 기준으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

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진행하고 있는 조 전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자녀 입시 부정 관련 특별수사와 국정농단 사건 공소 권위 등은 이어갈 수 있다. 정부는 의무경찰이 수행하던 전직 대통령 사저 경비 업무를 대통령경호처가 직접 수행하게 됨에 따라 경호 인력 78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대통령경호처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의료급여 경장보조 부족분 3209억원 및 태풍 '링링' 관련 재해대책비 예산 부족분 614억원을 2019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대통령령안 28건, 일반안건 6건을 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뉴시스

“불합리한 현행 온천법 신속 개정해야”

전북도, 장기 미개발 온천지역 주민불편 해소 위한 제도개선 추진

전북도는 온천발견 신고 이후 장기간 미개발 온천지역의 주민 불편 및 피해 방지를 위해 불합리한 현행 온천법을 신속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온천개발 승인 후 2년 내 사업 미착수의 경우 승인 취소 등 온천지구 해제가 가능하다. 일부 사업민을 시작하고 이후 장기간 개발이 중단된 온천의 경우 승인 해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도는 그동안 장기간 미개발 지역에 대한 승인 해제 근거 마련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온천법 개정을 건의(2018. 3월) 한 바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도의 건의 내용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에 개선 권고(2018.

12월)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다. 도는 장기 미개발 온천 지구 내 주민불편 및 재산권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법령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신속하게 온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촉구 건의할 계획이다. 건의 주요내용은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가 취소에 동의한 경우, ▲장기간 경과(10년 이상)하고, 개발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가 취소에 동의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도내 온천지구 23개소 중 사업 추진이 미진한 온천지구에 대해 장·단기

장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내 온천지구는 총 23개로서 운영 중 6개소, 개발진행 3개소가 있으며, 사업 미착수 9개소, 장기 미개발 또는 중단된 온천지구는 5개소다. 이 중 미착수 9개소는 개발 상황 및 사업착수 가능 여부를 파악하여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개발자와 시군 의견수렴을 통해 일제 정리하는 등 현행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 미개발 또는 중단된 5개소의 경우 일몰제를 적용해 정리할 수 있도록 온천법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촉구하고, 법령 개정 후 정리에 나감 계획이며, 앞으로도 시군과 함께 장기 미개발 및 미착수 사례로 지역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천개발 신고부터 운영까지 장기간 소외되는 행정절차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진성 기자

전북 중국사무소, 북방여행교역회 참가 전북도 관광홍보 '구슬땀'

전라북도 중국사무소(소장 이지형, 이하 '중국사무소')가 베이징 인근 하북성(河北)에서 전라북도 알리기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중국사무소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하북성 성도인 석가장(石家莊)시에 열리는 제24회 중국북방여행교역회 및 제4회 하북성여행산업발전대회에 참가, 전라북도 관광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제24회 중국북방여행교역회는 북경, 천진, 하북성 등 중국북방 10개 성이 함께 주최하는 행사로 이날 행사에는 전라북도(한국)를 비롯해, 말레이시아,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등 31개국과 중국내 20개 지방정부, 그리고 300여명의 중국 국내외 여행바

리어가 참가했다. 지난 14일 해외주요인사 및 하북성 정부요인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막식에서는 중국사무소 이지형 소장이 등폐연시장 바로 옆 좌석에 앉아 주요내빈으로 소개받는 한편 박람회장에는 일반적인 관광박람회 부스(3mX3m)보다 큰 크기의 부스 2동을 무료로 제공해 주는 등 남다른 환영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중국사무소와 석가장시 외사관공실 관계자가 만난 자리에서 이 소장이 새만금과 세계잡버리 등 전북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하자, 큰 관심을 보이며 2022년에 하북성에서 '새만금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자고 먼저 제안해오기도 했다.

이같은 성과는 중국사무소 이지형 소장와 석가장시 외사관공실 판젠잉 주임 간 교류활동을 통해 이뤄졌다. 지난 8월 28일부터 4일간 중국 귀주성 귀양시에서 열린 한중지방정부 교류회의에 참석한 이 소장와 석가장시 판 주임은 양 지역에 대해 환담하며 친분을 쌓았고, 판 주임의 행사 참가 요청과 이 소장의 '흔쾌한 수락'을 통해 '새로운 판시'와 함께 성사됐다. 전북도는 중국북방여행교역회와 이날 동시 개최된 '제4회 하북성 여행산업발전대회'에서 '전북의 4계'를 컨셉으로 계절별 전라북도 주요관광지 및 태권도, 한복, 스키 등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체험 상품을 16일까지 중점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전북 항만물류연구·자문회 개최... 군산항 특화산업 육성·신규화물 유치 방안 발표

전북도는 15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전라북도 항만 활성화를 위해 항만물류 전문가, 유관기관, 항만업체 관계자로 구성된 '전북도 항만물류연구·자문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문회의에서는 전북연구원 나정호 박사가 '군산항을 활용한 전라북도 특화산업 육성방안'을 주제로, 군산항의 운영현황과 과제, 한중카페리 주6항처에 따른 컨테이너 화물 및 관광 활성화, 군산시 연구과제인 군산항 신규화물 유치방안, 전라북도 목재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 전북도 신형삼 항만해운팀장은 새만금 신항만 건설의 그동안 추진상황과 기본계획 변경과정의 도의 역할

과 노력, 현안사항과 앞으로 대응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군산항 활성화를 위한 종합 토론회를 진행하며,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및 군산항의 대표 화물인 곡물 등 벌크화물 물동량 증대방안, 컨테이너 화물 유치 및 항로 다변화에 대한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또한, 최근 자동차 및 컨테이너 물동량 급감으로 군산항 항만 종사자가 겪는 어려움을 강조하며 정부 및 전북도 등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군산대 물류학과 고현정 교수(자문회 회장)는 "군산항은 현재 물동량에

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러한 어려운 국면을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관·학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한 부단한 연구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관계자는 "이번 자문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군산항 활성화 방안 등 정책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할 것"이라며, "군산항 및 항만 업계의 고민과 관심이 최대한 항만정책에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 항만물류연구·자문회는 지난 2014년 구성한 이후 매년 2차례 정기적으로 군산항 활성화 방안 등 전라북도 항만 현안사항과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김진성 기자

수도권 지역 벤처생태계 연결로 혁신 창업열기 '후끈'

도, 'KDB NextRound in 전북' 개최로 투자유치 행사 진행

전북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전북센터)는 15일 전북센터 2층 라운지에서 수도권 벤처캐피탈, 지역 혁신벤처생태계 유관기관, 지역소재 스타트업 등 약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은행(회장 이종걸)투자유치 프로그램인 'KDB NextRound in 전북' 스페셜라운드를 개최했다. 이번 전북 라운드는 2019년 제주, 춘천, 울산, 여수 등에 이은 7번째 지역 스페셜라운드로 지역 투자역량 강화 프로그램인 '수도권피칭마루'와 연계해 민관 협업을 진행했다. 1부는 지역 농·공업 사업체 견학 및 관광 020 중계플랫폼 운영사인 '액티부기'와 1인 맞춤형 다이닝 큐

레이션 모바일 플랫폼 운영사인 '흔' 법인의 만찬' 등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무장한 지역소재 유망 스타트업 4개사가 열린 투자유치 IR을 실시해 참석한 수도권 투자자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IR 이후 이어진 2부에서는 '한국형 정자의 신'의 저자이자 유망 스타트업 컨설턴트인 김유진 대표(김유진제작소)가 특강을 통해 '스타트업 창업 성공 노하우'라는 주제로 참석자들과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도 우범기 정부부처장은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고 부족한 지역 투자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산업은행과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통해 투자유치 프로그램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익산시 공고 제2019-2224호

익산 마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의견 청취 공고

익산시 마동 1057번지 일원에 대한 익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요내용

지구명	위치	주요 변경 내용		비고	
		구분	면적(㎡)		
마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익산시 마동 1057번지 일원	지하주차장	1,725.3	유수지설치를 위한 지하주차장 폐지	
		마동4호공원	1,725.3	2,926.5	유수지 면적 확보를 위한 공원부지 확장
		유수지	-	2,300	마동4호공원과 중복결정하여 지하에 설치

2. 변경 사유: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기상이변에 따른 돌발성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해 우수를 일시에 저장할 수 있는 우수저류 시설을 설치할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단지내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3. 열람기간: 신문 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4.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익산시청 건설국 도시개발과(063-859-5591)
5. 기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관계도서: 별첨(계제생략)

2019년 10월 16일 익산시장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